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지병근 | 조선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시민의식종합조사자료(2017)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며, 민주화 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해석을 통한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민주화운동의 외재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기념사업, 이념, 지역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서론

2019년 2월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을 비롯하여 민주화 운동을 폄훼해온 인사들을 국회에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단체들이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는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사업대상으로 지정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폄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구나 국회의원들과 같은 한국의 정치엘리트 내부에서조차 민주화 운동과 이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데 대한 의지가 지극히 취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어떠할까?!) 과연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고 이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을까?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에 앞서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행태를 조장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향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직후인 2017년 6.10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이하 시민의식종합조사 2017)를 이용

1)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민주화 과정은 물론 소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할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가치가 아직 내면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민주적 정치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그동안 일부의 선행 연구들이 주목했던 시민들의 거주 지역만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과 같은 사전 정향(predisposition)과 함께 민주화 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과 같은 합리적 평가 요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민주화의 경로와 성과에 따라 현격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이 구체제의 지배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 간의 타협적 민주화(transplacement)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는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정치 엘리트를 전면적으로 교체한 민주화(replacement)를 경험한 국가들에 비해서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²⁾ 이는 민주화 이후에도 생존에 성공한 권위주의 체제 시기의 집권당의 후계 정당(successor parties)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민주화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자신들을 위협했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거나 계승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며, 오히려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성취한 민주주의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지지의 수준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화 운동의 성과에 대한 불만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민주주의 체제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선호도, 갈망도, 만족도, 혹은 대안적 가치),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적 정체의 운영 체제와 방식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특성이나 국가간 다양성을 분석해왔다(Rose, Mishler, and Haerpfer 1998; Shin and McDonough 1999; Chu, Diamond, and Shin 2001; Mishler and Rose 2001;

2) 여기서 사용된 민주화 유형의 개념화에 대해서는 Huntington(1991, 114)을 참조.

지병근 2013). 하지만 아직까지 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을 가능케 했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단순히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위로, 보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이며, 이는 정치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른바 ‘기억투쟁’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치제도를 “마을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으로 수용하고 그 이외의 비민주적 정치제도를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Przeworski 1991; Diamond 1999).³⁾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와 실증 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를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기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절에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발생지 가설, 이념성 가설, 체험 가설, 유용성 가설 등 4가지 주요 가설들을 제시할 것이다. 3절에서는 시민의 식중합조사자료(2017)를 이용하여 과연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이들의 거주지, 이념적 성향, 연령, 민주화 운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관한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기초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4절에서는 주요 가설 검정을 위하여 민주화

3) 세보르스키(Przeworski 1991, 26)는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누구도 민주적 제도 외부에서 행동할 것을 상상할 수 없고, 모든 패자가 그들이 패배한 동일한 제도 내에서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는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5절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하였다.

II.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태도의 다양성과 그 원인들

1. 선행 연구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어떠한 전략으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체제 전환을 가능케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행론(transitology)의 핵심주제 가운데 하나였다(Huntington 1991; Przeworski et al. 1996; Przeworski and Limongi 1997; Gleditsch and Ward 1997; Bunce 2000; Carothers 2002; Wiarda 2002; Munck and Verkuilen 2002). 이는 민주화 운동의 성공 여부가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얼마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아래로부터’ 조직화되어 민주화가 추진된 사례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민주화 이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의 연구들이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간헐적으로 분석해왔다. 그러나 5.18 이외의 민주화 운동은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 분석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일부 선행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대표적으로 최준영(1998)은 광주사회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시민의식 종합조사 및 정책연구(응답자 연령 20세

이상 60세 미만, 조사기간 1998년 9월 11일 ~ 15일)를 비롯한 복수의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1996년경에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그만 거론하자는 의견을 표출한 이들의 비율이 광주 지역보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 두 배 가까이 높았다. 5.18 진압 관련자의 훈장 취소나 5.18 묘지의 국립묘지화에 대한 태도, 5.18이 “광주만의 문제”로 여겨지는 원인이 “홍보 부족과 언론 왜곡”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 등에 대해서도 호남과 다른 지역 사이의 차이는 매우 컸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 시민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역별 차이가 한국의 지역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부의 연구들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나 이해 방식에 관심을 두었다(이해영 2014; 이해영 2016). 예를 들어 이해영(2016)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 대구, 서울 등지의 고등학생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기존의 공식적 기억에 대한 대항기억으로 출현하였고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에 의해 수용되는 경로”를 거쳤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집단기억”(p. 69)을 분석하였다. 그는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이 공식 역사를 담고 있는 교과서에 실린 5.18의 내용을 인정하지만, 공식 역사와 비공식 역사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배재창(2016)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 지역 대학생들의 태도가 출신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상기시키는 처치를 통해 ‘점화’된 이후 전남 출신 대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고 광주에 대한 암묵적 선호가 증가한 반면, 광주 출신 대학생들은 5.18의 ‘외상’을 떠올리며 광주에 대한 암묵적 선호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는 5.18 민주화운동이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광주 출신 대학생들에게 “암울했던 사건”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광주에 대한 이들의 선호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 75).

2. 가설들: 발생지, 이념성, 체험, 그리고 유용성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5.18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 이외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5.18 민주화운동 단일 사례 연구 디자인, 지역-단일 변인 중심의 영향분석)으로 인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태도가 단순히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론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1) 민주화 운동의 발생지와 이념적 특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4.3항쟁, 4.19혁명(4.19혁명 직전의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마산의거),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국가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화 운동들에 대한 태도 또한 다양하며 때로는 대립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무엇보다 이들이 기념하는 각각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주요 민주화 운동

	시기(저항대상)	민주화 운동	발생 연도	발생 지역
1	제1공화국(이승만)	4.3 항쟁	1948	제주
2		4.19 혁명	1960	전국
3	제3공화국(박정희)	6·3한일회담 반대 운동	1964	전국
4		3선개헌 반대 운동	1969	전국
5	제4공화국(박정희)	유신 반대 투쟁	1972~	전국
6		부마항쟁	1979	부산·마산
7		5.18 민주화운동	1980	광주
8	제5공화국(전두환)	6.10항쟁	1987	전국
9	제6공화국(박근혜)	촛불혁명	2016	전국

한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은 발생한 지역이나 이념적인 지향 측면에서 다양하다. 물론 이러한 특성이 민주화 운동이 상징하는 “보편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민주화 운동이 특정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인식틀”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다(최준영 1998, 2). 아울러 민주화 운동의 목표가 특수한 이념적 지향이 아니라 인권이나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은 시민들의 거주 지역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역의 거주자 혹은 출생자들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도나 자부심의 수준이 높기에 이를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의지 또한 강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저항 세력이 이념적으로 진보인지 혹은 보수인지도 중요하다. 최소한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4대 민주화 운동들은 극단적 반공주의 성향의 정치 세력 혹은 군부 세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기념하는 사업은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가능성은 적다.⁴⁾ 반공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민주화 운동이 ‘체제 혼란’을

4) 이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파병을 기념하는 행사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이들이 더 호응

노린 ‘좌익’의 공세라는 이념적 조작이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가중시켰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부마항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지인 부산과 경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시 발생지인 광주광역시에서 더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제주 4.3항쟁처럼 특정 지역에서 고립된 채 무장 투쟁까지 전개되었으며, 장기간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집권 세력에 의해 이념적으로 좌익에 의한 봉기라는 이미지로 조작되어왔기에 다른 민주화 운동들과 달리 보수적인 이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공간적 특성과 권위주의 체제에 의한 이념적 조작은 이를 기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도 균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가설 1: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
들일수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발생
지 가설)

가설 2: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이념성 가설)

2) 민주화 운동의 발생 시기와 유용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인식에는 민주화 운동의 경험 여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오래된 민주화 운동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이를 먼 과거의 사건이라는 시간적 거리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더구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더 이상 이를 기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억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투쟁'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용서'하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⁵⁾

따라서 연령대가 낮은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거나 계승할 필요성을 느끼는 강도가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 달리 연령대가 높은 이들이 '생애 주기(life cycle)'에 따라 보수화되어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강도가 오히려 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해 식상함을 느껴 그 필요성을 덜 느낄 수도 있다.⁶⁾

민주화 운동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이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와 함께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화 운동이 사회 발전에 유용하다고 평가할수록 이를 기념하거나 계승할 필요성을 느끼는 강도는 강화될 수 있다(민주화 운동 유용성 가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연령이 적을수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민주화운동 체험가설)

가설 4: 민주화 운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수록

-
- 5) 5.18 민주화운동이 고립되어 진행되었기에 타지에서 대규모 학살에 대하여 방관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느끼는 일종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함께 '외면한 자의 슬픔'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 6) 그 외에도 민주화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잔학성과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4.19혁명이나 6.10항쟁과 달리 4.3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은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기념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거부감과 불행한 과거는 잊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낀다(민주화
운동 유용성 가설)

III. 기초 통계

1. 거주 지역 및 이념적 성향과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

아래의 표 2는 거주지별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보여준다(구체적인 질문항은 부록 1 참조). 이 표에 잘 나타나 있듯이 거주지에 따라 민주화 운동 기념과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매우 상이하였다(부록 2 참조). 이들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호남에서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에 대하여 어느 정도/매우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대구·경북에서 가장 낮았다: 호남(86.11%), 충청(81.33%), 부산·울산·경남(80.88%), 수도권(79.42%), 기타(74.64%), 대구·경북(69.61%).

〈표 2〉 거주 지역과 이념에 따른 민주화 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

지역	민주화 운동 기념/계승 필요성						χ ²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수도권	8	16	83	257	156	520	36.23*
	1.54	3.08	15.96	49.42	30.00	100.00	
호남	0	4	11	54	39	108	
	0.00	3.7	10.19	50.00	36.11	100.00	
부산·울산·경남	2	2	22	65	45	136	
	1.47	1.47	16.18	47.79	33.09	100.00	
대구경북	1	3	27	53	18	102	
	0.98	2.94	26.47	51.96	17.65	100.00	
충청	0	7	7	34	27	75	
	0.00	9.33	9.33	45.33	36.00	100.00	
기타	2	1	15	36	17	71	161.43***
	2.82	1.41	21.13	50.7	23.94	100.00	
이념							
매우 진보	1	0	2	8	20	31	
	3.23	0.00	6.45	25.81	64.52	100.00	
다수 진보	0	3	19	126	138	286	
	0.00	1.05	6.64	44.06	48.25	100.00	
중도	3	7	85	211	105	411	
	0.73	1.70	20.68	51.34	25.55	100.00	
다소 보수	7	16	48	137	32	240	
	2.92	6.67	20.00	57.08	13.33	100.00	
매우 보수	2	7	11	17	7	44	
	4.55	15.91	25.00	38.64	15.91	100.00	
전체	13	33	165	499	302	1,012	
	1.28	3.26	16.3	49.31	29.84	100.00	

주: * p<.05 ** p<.01 *** p<.001

자료: 시민의식종합조사(2017)

이념적 보수성이 강할수록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

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념적 성향이 다소/매우 보수적인 응답자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에 대하여 어느 정도/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진보적인 응답자들에 비해 현격히 적었다. 다만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다소/매우 보수적인 이들 또한 압도적 다수가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이다: 매우 보수적인 응답자들 가운데 54.55%, 다소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70.41%가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⁷⁾

2. 연령 및 민주화 운동의 유용성과 민주화 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

아래의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60대 이상과 그 이하의 연령대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50대 이하까지 민주화 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80% 내외로 연령대별 차이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신개헌 반대 투쟁 등 1970년대 초 혹은 그 이전 민주화 운동을 경험할 수 있었던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8.29%로 50대 이하의 비율보다 13.8p% 적었다. 이는 민주화운동 체험시설이 현실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화 운동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계 또한 주목할 만하다. 민주화 운동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7)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선호하는 정당별로 민주화 운동 기념과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부록 3 참조). 자유한국당(58.12%)이나 바른정당(64.86%)과 같이 보수적인 정당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정의당(93.33%), 더불어민주당(91.33%), 국민의당(65.79%)과 같이 진보적 혹은 개혁성향의 정당을 선호하는 이들에 비해서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의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선호하는 이들 가운데 과반수가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는 사실이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이들일수록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거나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거나 계승하는 것이 어느 정도/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80%가 넘는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가운데 유사한 답변을 한 이들의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 및 민주화 운동의 유용성 평가에 따른 민주화 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

	민주화 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						χ ²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연령대							65.74***
19-29세	4	6	23	84	63	180	
	2.22	3.33	12.78	46.67	35.00	100.00	
30-39세	2	1	28	82	66	179	
	1.12	0.56	15.64	45.81	36.87	100.00	
40-49세	2	5	26	108	65	206	
	0.97	2.43	12.62	52.43	31.55	100.00	
50-59세	4	5	27	90	75	201	
	1.99	2.49	13.43	44.78	37.31	100.00	
60세 이상	1	16	61	135	33	246	
	0.41	6.50	24.80	54.88	13.41	100.00	
전체	13	33	165	499	302	1012	
	1.28	3.26	16.30	49.31	29.84	100.00	
민주화 운동의 유용성							394.44***
매우 부정적	5	2	6	4	3	20	
	25.00	10.00	30.00	20.00	15.00	100.00	
다소 부정적	5	16	40	34	9	104	
	4.81	15.38	38.46	32.69	8.65	100.00	
다소 긍정적	3	14	114	386	137	654	
	0.46	2.14	17.43	59.02	20.95	100.00	

매우 긍정적	0	1	5	75	153	234
	0.00	0.43	2.14	32.05	65.38	100.00
전체	13	33	165	499	302	1,012
	1.28	3.26	16.30	49.31	29.84	100.00

주: *** p<.001

자료: 시민의식종합조사(2017)

IV.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아래의 표 4는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서열변수인 민주화 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1~5: 1=전혀 필요하지 않다, 5=매우 필요하다)이며, 따라서 서열 로지스틱 회귀 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기본 모델의 독립변수로는 민주화 운동이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1~4: 1=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등 두 개의 거주지역 더미변수, 이념적 보수성(1~5: 1=매우 진보, 5=매우 보수), 연령, 소득(1~5: 200만원 미만=1, 200~299만원=2, 300~399만원=3, 400~499만원=4, 500만원 이상=5), 교육 수준(1~3: 중졸 이하=1, 고졸=2, 대재 이상=3), 성별(남성=1) 등이다. 이 변수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발원지였던 광주광역시, 부산, 경남이 소재한 호남 및 부산·울산·경남, 민주적 정치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득과 교육 수준 등은 종속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념적 보수성, 연령, 소득 등의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⁸⁾

8) 4.19혁명 이후 전개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이념적으로 반공보수주의에 의존해온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념이 보수적인 이들은 이를 기념하거나 그 정

표 4의 모델 1에서 민주화 운동이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 이 변수의 승산비는 4.81($p < .001$)로, 이는 민주화 운동이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을 한 단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3.8배(4.81-1) 가까이 더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적 성향 또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 보수성이 한 단계 더 강할수록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43%(1-.57)정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산비 .57, $p < .001$).⁹⁾

〈표 4〉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변수	모델 1 승산비(odds ratio)	모델 2 승산비(odds ratio)
민주화 운동 유용성	4.81*** (0.55)	4.54*** (0.53)
더불어민주당 지지		2.25*** (0.32)
자유한국당 지지		1.02 (0.23)

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에, 연령은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위 ‘계급배반투표’ 성향과 같은 보수적 행태가 나타나는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적 정치문화가 강화되어 민주화 운동과 이를 기념 혹은 정신계승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9)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시민의식종합조사는 ‘촛불시위’에 맞서 ‘태극기시위’가 조직되면서 이념적 갈등이 극심했던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절차가 종료되고 문재인정부가 등장한 직후인 2017년 7~8월(2017.7.6.~8.7.)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념적 성향이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정신계승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호남	1.33 (0.28)	1.09 (0.23)
부산·울산·경남	1.15 (0.20)	1.21 (0.21)
소득수준(5)	1.05 (0.05)	1.04 (0.05)
이념적 보수성(5)	0.57*** (0.05)	0.65*** (0.06)
연령	1.00 (0.01)	1.00 (0.01)
교육수준(3)	1.04 (0.13)	1.06 (0.13)
남성	0.84 (0.11)	0.83 (0.11)
Constant cut4	0.13*** (0.09)	0.20** (0.15)
Constant cut1	0.56 (0.38)	0.86 (0.59)
Constant cut2	4.45** (2.98)	6.98*** (4.74)
Constant cut3	72.27*** (49.10)	122.47*** (84.73)
Pseudo R2	0.148	0.148
Observations	1,012	1,012

주: ()안은 seEform; *** p<0.01, ** p<0.05

자료: 시민의식종합조사(2017)

이와 달리 호남 혹은 부산·울산·경남 거주 여부와 연령,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남성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다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

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이다(승산비가 1보다 큼). 그리고 이는 저소득층이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해소하는데 관심이 많은 진보 정당보다 그렇지 않은 보수정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소위 ‘계급배반 투표’ 현상 처럼, 사회경제적 차원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진보정당이 저소득층의 불만을 제대로 해소해 줄 것이라는 인식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이 이들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기본 모델과 정당 지지도를 추가한 모델(표 4의 모델 2)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정신계승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 여부는 종속 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의 유용성, 즉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이념적 보수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 연구의 주요 가설들 가운데 발생지 가설과 민주화운동 체험가설을 제외한 이념성 가설과 유용성 가설이 근거가 없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

10) 표 4의 모델 1에서 교육과 소득 사이의 상관성으로 인한 공중다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두 변수의 표준오차는 각각 .13과 .05로 높지 않았으며, 분산팽창요인(VIF) 또한 2.11과 1.31로 크지 않았다(평균 VIF는 1.33).

11) 시민의식종합조사(2017)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을 이용하여 민주화 운동의 표상(表象)을 측정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610명, 60.28%)이라고 응답한 이가 가장 많았으며, 4·19혁명(276명, 27.27%), 6·10항쟁(97명, 9.58%), 부마민주항쟁(24명, 2.37%), 기타(5, 0.49%)가 그 뒤를 이었다.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estimation method)으로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V. 결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이 연구는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정신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7년 실시된 시민의식종합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할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민주화 운동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민주화 운동의 외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유용성 가설) 및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의 이념적 성향(이념성 가설)의 함수임을 잘 보여준다. 반면, 민주화 운동의 발생지 거주 여부(발생지 가설)와 연령(민주화운동 체험가설)과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함의는 무엇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유용성, 다시 말해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정치체제는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며, 한국 사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일 경우 이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민주화 이후 오히려 사회경

시도한 결과(부록 4), 5.18 민주화운동보다 4.19혁명을 민주화 운동의 표상으로 여길 가능성은 거주지가 부산·울산·경남이거나,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연령이 많거나, 여성인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0항쟁을 기본범주로 두었을 때 4.19혁명은 호남에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부마민주항쟁은 연령이 많을수록,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5.18 민주화운동은 남성, 교육수준이 낮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민주화 운동의 표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

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민주화 운동이나 이를 기념하거나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 6.10항쟁을 이끌었던 소위 ‘586세대’ 가운데 일부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이념적으로 조작된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해준다.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정신 계승에 대한 태도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비록 반공 보수 성향의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특성으로 인해 빚어진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소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과 그 보편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내면화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념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대 간 차이를 넘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4.19혁명과 6.10항쟁 등 전국적 차원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대구의 2.28학생의거, 대전의 3.8민주의거, 제주의 4.3항쟁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대상은 대규모 시위나 국가폭력이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의 지원 방식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기념 행사에 치중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6.3 항쟁,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민청학련 사건), 1980년대 지속되었던 ‘5월투쟁’, 1990년대 말경의 노동법 개악 반대 시위, 2002년 SOFA 개정 투쟁,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및 최근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민주화 운동으로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별·분야별·시기별로 구분하여 이들에 관한 연구와 교육, 추모 및 치유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록 2〉

거주지역에 따른 민주화 운동 기념/계승 필요성($\chi^2=115.50^{***}$)

지역	민주화 운동 기념/계승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서울	4	6	34	106	46	196
	2.04	3.06	17.35	54.08	23.47	100.00
경기도	2	5	37	113	87	244
	0.82	2.05	15.16	46.31	35.66	100.00
인천	2	4	6	30	15	57
	3.51	7.02	10.53	52.63	26.32	100.00
광주	0	1	10	10	10	31
	0.00	3.23	32.26	32.26	32.26	100.00
전라북도	0	1	1	21	17	40
	0.00	2.50	2.50	52.50	42.50	100.00
전라남도	0	2	0	23	12	37
	0.00	5.41	0.00	62.16	32.43	100.00
부산	1	0	8	30	32	71
	1.41	0.00	11.27	42.25	45.07	100.00
울산	0	1	6	8	8	23
	0.00	4.35	26.09	34.78	34.78	100.00
경상남도	1	2	14	35	13	65
	1.54	3.08	21.54	53.85	20.00	100.00
대구	1	3	14	22	9	49
	2.04	6.12	28.57	44.90	18.37	100.00
경상북도	0	0	13	31	9	53
	0.00	0.00	24.53	58.49	16.98	100.00

대전	1	0	4	16	9	30
	3.33	0.00	13.33	53.33	30.00	100.00
충청북도	0	0	2	16	13	31
	0.00	0.00	6.45	51.61	41.94	100.00
충남/세종시	0	7	5	18	14	44
	0.00	15.91	11.36	40.91	31.82	100.00
제주도	1	1	2	4	3	11
	9.09	9.09	18.18	36.36	27.27	100.00
강원도	0	0	9	16	5	30
	0.00	0.00	30.00	53.33	16.67	100.00
Total	13	33	165	499	302	1,012
	1.28	3.26	16.30	49.31	29.84	100.00

주: *** p<.001

자료: 시민의식종합조사(2017)

〈부록 3〉

선호정당에 따른 민주화 운동 기념 및 계승의 필요성($\chi^2=153.32^{***}$)

정당	민주화 운동 기념/계승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정의당	0	0	3	19	23	45
	0.00	0.00	6.67	42.22	51.11	100.00
더불어민주당	0	2	35	203	187	427
	0.00	0.47	8.2	47.54	43.79	100.00
국민의당	0	2	11	13	12	38
	0.00	5.26	28.95	34.21	31.58	100.00
바른정당	0	2	11	19	5	37
	0.00	5.41	29.73	51.35	13.51	100.00
자유한국당	6	15	28	59	9	117
	5.13	12.82	23.93	50.43	7.69	100.00
전체	6	21	88	313	236	664
	0.90	3.16	13.25	47.14	35.54	100.00

주: *** p<.001

자료: 시민의식종합조사(2017)

〈부록 4〉

민주화 운동의 표상 결정요인

변수	기본범주-5.18 민주화운동(모델1~3)			기본범주-6.10항쟁(모델 4-6)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4.19혁명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4.19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호남	-1.67*** (0.35)	-0.71 (1.08)	-0.50 (0.38)	-1.17** (0.48)	-0.20 (1.12)	0.50 (0.38)
부산·울산·경남	0.54** (0.22)	2.57*** (0.49)	-0.19 (0.36)	0.73 (0.38)	2.76*** (0.58)	0.19 (0.36)
소득수준(5)	-0.06 (0.06)	0.14 (0.18)	0.13 (0.08)	-0.19** (0.09)	0.02 (0.19)	-0.13 (0.08)
이념적 보수성(5)	0.38*** (0.10)	0.16 (0.26)	0.19 (0.13)	0.19 (0.15)	-0.03 (0.28)	-0.19 (0.13)
연령	0.04*** (0.01)	0.08*** (0.02)	0.03*** (0.01)	0.01 (0.01)	0.05*** (0.02)	-0.03*** (0.01)
교육수준(3)	-0.26 (0.15)	0.85 (0.46)	0.48** (0.24)	-0.74*** (0.25)	0.37 (0.50)	-0.48** (0.24)
남성	-0.74*** (0.17)	-2.36*** (0.64)	-0.73*** (0.23)	-0.01 (0.26)	-1.63** (0.67)	0.73*** (0.23)
Constant	-2.07*** (0.75)	-7.98*** (2.26)	-4.20*** (1.06)	2.13 (1.16)	-3.77 (2.42)	4.20*** (1.06)
Observations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주: ()안의 수는 표준오차; *** p<0.01, ** p<0.05
 자료: 시민의식종합조사(2017)

참고문헌

- 배재창. 2016.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지역 대학생에게 미치는 암묵적 영향.”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제4호, 75-102.
- 이해영. 2014. “학생들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연구』. 제20권, 425-459.
- 이해영. 2016.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대구·서울 학생의 역사인식 비교.” 『역사와 교육』. 제13권, 67-104.
- 지병근. 2013.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인식.” 『국가전략』. 제19권 1호, 31-55.
- 최준영. 1998. “여론조사에 나타난 5·18 민주화운동과 지역감정.” 『지역사회연구』. 제6권, 1-19.
- Bunce, Valerie. 2000. “Comparative Democratization: Big and Bounded Generaliza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6-7): 703-734.
- Carothers, Thomas. 2002.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13(1): 5-21.
- Chu, Yun-han, Larry Diamond, and Doh Chull Shin. 2001. “Halting Progress in Korea and Taiwan.” *Journal of Democracy* 12(1): 122-136.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leditsch, Kristian S. and Michael D. Ward. 1997. “Double Take: A Reexamination of Democracy and Autocracy in Modern Poli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3): 361-383
- Huntington, Samuel.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klahoma Press.
- Mishler, William & Richard Rose. 2001. “Political Support for Incomplete Democracies: Realist vs. Idealist Theories and Measur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4): 303-320.

- Munck, Gerardo L. and Jay Verkuilen. 200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Democracy: Evaluating Alternative Indi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1): 5-34.
- Przeworski, Adam, and Fernando Limongi. 1997. "Modernization: Theories and Facts." *World Politics* 49(2): 155-183.
- Przeworski, Adam, Michael E. Alvarez, Jose Antonio Cheibub, and Fernando Limongi. 1996. "What Makes democracies endure?" *Journal of Democracy* 7(1): 39-55.
-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2010. *Democracy and the Limits of Self-Govern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 Richard, William Mishler, and Christian Haerpfer. 1998. *Democracy and Its Alternatives*.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hin, Doh Chull and Peter McDonough. 1999. "The Dynamics of Popular Reactions to Democratization in Korea." *Journal of Public Policy* 19. 1-32.
- Wiarda, Howard J. 2002. *Comparative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Mason: Harcourt College Publishers.

투고일: 2019.06.19. 심사일: 2019.07.19. 게재확정일: 2019.08.07.

Public Attitudes toward the Memorial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Jhee, Byong-Kuen | Chosun University

Utilizing the public survey culled by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KDF) in 2017, this study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memorial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that occurred in Korea from 1960s and inheritance of their spirits. It shows that public attitudes are determined by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the perceived utilities of democratic movements: those whose ideological orientations are progressive and those who believe that democratization movements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memorial of them.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efforts to examine and reevaluate democratization movements without ideological bias and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ir extrinsic values should be made.

Key Words | Democratic movement, Democracy, Memorial service, Ideology, Region